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8건

검 토 보 고

1. 검토 과정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7일
- 검토기간 : 2023년 10월 27일 ~ 11월 17일

2. 주요 내용

○ 재계약²⁾ (3건)

- ▶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재위탁³⁾ (4건)

- ▶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신규 위탁 (1건)

- ▶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

2)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3) 재위탁 :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4. 검토 의견

○ 주요내용

①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는 체험 중심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 ▶ 본 동의안은 기 운영위탁 기관인 ‘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지부’의 운영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를 바탕으로 향후 1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임

【 위 탁 계 획 】

구 분	내 용
사무명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내용	체험이 있는 입교 교육(낙동강승전기념관), 찾아가는 학교 교육(신청교)
기 간	2024. 1. ~ 2024. 12. (1년)
선정방식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수탁기관	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
소요예산액	총 4,000만원 (자체예산)

②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 사무는 역사현장 탐방 중심의 안보·역사 체험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올바른 안보관 및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 본 동의안은 기 운영위탁 기관인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의 운영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재계약 적정)를 바탕으로 향후 1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임

【 위 탁 계 획 】

구 분	내 용
사무명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
사무내용	지역내 안보현장(전적지) 견학을 통한 안보·역사 체험교육, 찾아가는 학교 교육(신청교)
기 간	2024. 1. ~ 2024. 12. (1년)
선정방식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수탁기관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
소요예산액	총 3,000만원 (자체예산)

③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체험학습 등 학생의 흥미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상담을 통해 학교 복귀와 학업 지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 본 동의안은 기 운영위탁 기관인 ‘동산Wee센터 등 5개

기관'의 운영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상담·치료·교육·보호 등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재계약 적정)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위탁 중인 전문기관 5곳을 재계약하려는 것임

【 위 탁 계 획 】

구 분	내 용
사무명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내용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기 간	2024. 1. ~ 2024. 12. / 2024. 3. ~ 2025. 2. (1년) ⁴⁾ 2024. 3. ~ 2027. 2. (3년)
선정방식	사전 적성성 검토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5개 기관)
수탁기관	동산Wee센터, 영남대의료원Wee센터, 대구가톨릭청소년회, (사)삼동청소년회, 서정길대주교재단
소요예산액	총 5억 8,886만원 (특교 486만원, 자체예산 5억 8,400만원)

④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사무는 2024년 교육부 국가시책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창업가정신·문제해결력 및 창의적 진로개별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특화형

4)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70점 이상 80점 이하 기관 2곳[동산Wee센터(24.1.~12.), (사)삼동청소년회(24.3.~25.2.)]은 1년 재계약 후 평가를 통해 2년 재계약 방식 추진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위 탁 계 획 】

구 분	내 용
사무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사무내용	대구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창업교육 인프라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 운영 지원
기 간	2024. 3. ~ 2024. 12. (10개월)
선정방식	공모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2개소)
소요예산액	총 8,000만원 (특교 5,000만원, 자체예산 3,000만원)

⑤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는 학교폭력 가해·교권침해·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지정된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을 통해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수 지도⁵⁾로 가해행위 재발 방지 및 학교 적응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 ▶ 본 동의안은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특별교육·전문상담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임

5) 상담이나 그 밖의 생활지도를 일단 실시한 뒤에 그런 지도를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건전하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상담이나 그 밖의 교육적 조력을 더해 주는 것

【 위 탁 계 획 】

구 분	내 용
사무명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내용	학교폭력 가해·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기 간	2024. 3. ~ 2025. 2. (1년)
선정방식	공모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26개 기관)
소요예산액	총 3억 2천만원 (자체예산)

[6]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 숙려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 본 동의안은 학업중단 숙려 기간 학생들에게 전문적 상담 · 학업지원 · 각종 체험학습과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위 탁 계 획 】

구 분	내 용
사무명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내용	학업중단 숙려 기간 학생에 대한 특화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 간	2024. 4. ~ 2024. 12. (9개월)
선정방식	공모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5개 기관)
소요예산액	총 1억 924만원 (특교 8,424만원, 자체예산 2,500만원)

7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사무는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 밖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지속 및 학력인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 ▶ 본 동의안은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위 탁 계 획 】

구 분	내 용
사무명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사무
사무내용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시범사업 홍보
기 간	2024. 5. ~ 2024. 12. (8개월)
선정방식	공모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1개 기관)
소요예산액	총 1,800만원 (특교 1,000만원, 자체예산 800만원)

8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

- ▶ ‘2024.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운영’ 사무는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상담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유해약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 본 동의안은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민간위탁 적정)를 바탕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 인프라와 전문 강사를 갖춘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위 탁 계 획 】

구 분	내 용
사무명	2024.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운영
사무내용	유해약물 예방 교육, 유해약물 예방 문화 확산 및 교육안전망 구축 사업
기 간	2024. 3. ~ 2025. 2. (1년)
선정방식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의계약
수탁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소요예산액	총 5,000만원 (자체예산)

○ 검토결과

- ▶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등 총 8건의 사무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 먼저,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의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현황 】

연 번	동 의 안 명
1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재계약 3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존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전문성·위탁의 적정성 등이 확인되었으며,

- ▶ 해당 기관들이 오랜기간 지역에서 관련 사무를 지속해온 만큼 해당 사무와 관련한 전문성·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재계약 동의안 3건 모두 특정 민간위탁 기관에 다년간 사무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휘·감독), 제19조(처리상황의 감사), 제20조(종합성과평가) 등 위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예방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 다음으로 지역사회 창업체험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현황 】

연 번	동 의 안 명
1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사무는 교육부 국가시책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내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으며,

- ▶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교권 침해·학교 부적응 등의 사안에 대해 관계법령상 특별교육·심리상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사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사무와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사무의 경우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학생들에게 개별화·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의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상담을 활용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 다만, 재위탁 동의안 4건의 경우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므로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무를 효과적이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 비록, 공모 과정을 거치나 기존 민간위탁 기관이 다년간 재계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공모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정비를 통해 공모가 가지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 다음으로 신규 위탁 동의안인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현황】

연 번	동 의 안 명
1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

- ▶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운영」 사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체계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 인프라 및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 다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3조(책무),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 학생 마약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보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해약물 예방 관련 자료 개발·보급하는 등, 학교의 일상공간 속에서도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각 수탁기관에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답습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상으로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교육감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2011. 7. 28., 2013. 3. 23., 2013. 8. 13., 2021. 7. 20.>

□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사업의 위탁)

-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나라사랑교육계획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5(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1. 12. 21.>
 1. 성폭력 예방
 -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3조(책무)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2. 9. 14.>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 ②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8. 2., 2023. 6. 27.>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2023. 6. 27.>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22. 8. 30.>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한 교육·상담·교원 연수 및 숙려제 운영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학업중단 학생의 재취학 및 재입학을 위한 상담·학습지원·교육·단기 보호 등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타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